

공무직근로자 생활안정 금융서비스 지원

도-하나은행-서울보증보험, 도 소속 직원 후생복지 증진 업무협약 맺어 도내 시·군 협약 체결 시... 공무직 근로자 5000여명 금융혜택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하나은행 및 서울보증보험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신동범 전북공무직노조

연맹 부위원장, 도영창 전북자치도 공무원직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도 공무직근로자에게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 공무직근로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서

비스 제공 △도 공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보증보험 발급 △안정적인 협약추진 및 관리△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사항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기존보다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공무직근로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금리 인상 등 조치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우리 직원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직원이 더 나은 금융혜택을 누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하나은행 및 서울보증보험과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도 "전북자치도의 공무직근로자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계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자치도청의 공무직근로자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북자치도 내 시군 공무직근로자에게도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북자치도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도내 시군에서도 하나은행과의 금융서비스지원 업무협약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도내 공무직근로자 5,000여명이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지난 27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금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왼쪽)와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명순 SGI서울보증대표이사, 도영창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벼멸구 피해 대응 '총력'

피해 버는 농가희망 전량 정부 차원 매입 결정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복구비 지원 건의

전북 지역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 투입, 벼멸구 발생포장과 주변 필지에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벼멸구로 인한 피해 면적은 11개 시군 7,200ha다. 임실 1,928ha, 순창 1,460ha, 남원 1,015ha 등 대체로 중간 산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벼멸구 확산 방지를 위해 도비 5억원을 포함한 12억 5,000만원을 긴급 투입, 벼멸구 발생포장과 주변 필지에 긴급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농식품부에 벼멸구 피해 벼 전량을 정부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 건의했다.

/이만호 기자

그 결과 정부 차원에서 벼멸구 피해 벼 전량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농업재해에 대한 인정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이번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쌀값 하락에 이어 벼멸구 피해까지 발생하여 농가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어 농가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벼멸구는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중국 남부에서 저기압 기류를 타고 날아오는 해충으로, 주로 벼 아랫부분에서 뱃대를 흡즙하면서 점차 벼가 말라 죽는 병증을 나타낸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위한 준비 '돌입'

전북자치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설명회 개최 특화 지역 지정 위해 시군·관계기관 협력 중요성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7일 도내 시군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내년 상반기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유하고,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며 차별화된 전략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의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시군의 참여와 협력이 전북형 분산에너지 모델의 성공적 지정에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법 제정 이후,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법 대응 협의체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연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전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는 민간기업 또는 기초자치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제안하면,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이후 산업부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을 승인하게 된다.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소과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군에서도 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협력 전국모범사례 선정

도, 전국 심포지엄서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우수사례 발표 도-지원단-책임의료기관, 긴밀한 협력 통한 성과 인정 받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책임의료기관 커넥티드케어 심포지엄'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한 행사로,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도내 책임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수 의료 제공과 공공보건의료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하게 되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2021년 공공의료팀을 신설하고, 2022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도내 공공병원과 시군 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책임의료기관 커넥티드케어 심포지엄'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정기적인 협력과 자문을 통해 필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울러, 올해 4월에는 전국 책임의료기관 선정 공모에서 3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어, 전북의 5개 진료권 모두에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전북은 필수 의료 제공체계를 더욱 강화했으며, 지방의료원의 경영혁신 평가에서도 남원의료원이 최우수, 군산의료원이 우수등급을 받아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증 응급환자 이송·진원 시스템, 주요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성과 등도 발표됐다.

이정우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된 것은 전북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위한 대규모 안전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대회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전주, 소방 및 건축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회장 전반의 안전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대회장 전체를 순회하며 시설물의 구조 안전성, 관람객 동선의 적정성, 그리고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임시로 설치된 기업 전시관의 구조적 안전성은 구조 기술 전문가가 직접 확인하였으며, 가을철 태풍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인 안전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안전 관리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대회 시작 전까지 모든 보안 조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대회 준비 단계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안전 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임시 구조물 설치와 관리, 재난 대응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아동, 보호·교육 대상 아닌 권리 주체'

서난이 도의원,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 9)이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주요 내용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2년 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해 놀이 공간, 놀이 프로그램, 관련 사업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시설 조성,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놀이문화 확산,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 등 다양한 관련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놀 권리 증진 전문단을 구성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서난이 의원은 "그동안 아동정책이 교육과 보육정책 중심이었고 놀이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교육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다양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북자치도가 전북지역 아동의 놀이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 아동들이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결과, 아동의 비만율은 크게 증가(3.4-14.3%, 9-17세)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지속적으로 존재(스트레스도 1.2%, 우울감 경험률 4.9%, 자살생각 2.0%, 9-17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호 기자

진형석 도의원,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지난 26일 오후 전주중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교육 현안



과 학교 현안 등에 대한 논의와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소통을 통해 교육 현안·학교 현안·지역 현안·학교의 애로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소통함으로써 교육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늘봄학교와 관련 일선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듣고 교육공동체 사이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 늘봄학교의 내실화·안착화를 도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만호 기자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8번 잡은 어선 혼획 빙자한 고래 불법 포획 막아야

A출하자 총 4억2369만원 수익... 올해만 3개월동안 3마리 위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거래가 가능한 밍크고래가 연평균 약 60마리 정도 혼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밍크고래를 잡는 8번까지 잡은 어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혼획된 고래는 총 4,084마리에 달한다.

이 중 2024년 현재 기준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수협 등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한 고래는 밍크고래를 포함해 까치돌고래, 쇠돌고래, 큰머리돌고래, 긴부리돌고래 등 5종이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5종의 고래는 최근 5년간 372마리 혼획되었으며 이 중 밍크고래가 86.8%에 달한다.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은 고래는 해경이 불법포획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위탁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죽은 고래에 한해 수협 등을 통해 위탁판매할 수 있다.

특히 밍크고래의 경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가격에 거래되는 탓에 소위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윤 의원은 고래 위판내역과 관련해 수협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최근 5년간 '밍크고래'가 수협에 위판된 건수는 총 328건이며 거래금액은 총 153억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마리당 평균 4,671만원으로, 최고가는 1억7,730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A출하는 최근 5년간 밍크고래를 무려 8번이나 혼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출하지는 밍크고래 8마리 총 4억 2,369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올해만 3개월 동안 3마리를 위판했다. 5년 이상 위판한 출하는 A출하자 외 3명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빈번한 혼획이 의도적인 불법포획인지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작살 혼획이나 포획 도구 등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까지 이어지기 어렵고, 대부분 선내 CCTV가 없기 혼획과 불법포획의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고래를 의도적으로 포획했거나 혹은 우연히 그물에 걸린 고래를 인지하고도 구조하지 않고 혼획으로 빚지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고래 위판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포획을 보다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 정음=김대환 기자